

CSR과 ISO26000 : 미국내 반응

송호창 (미국 코넬대 ILR 스쿨 visiting scholar 변호사)
유건재 (미국 코넬대 ILR 조직행동 박사과정)
정선욱 (미국 코넬대 ILR 스쿨 노사관계 박사과정)

■ 머리말

ISO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04년 9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무그룹을 만들어 연구를 시작한 이래 수차례의 수정과정을 거쳐 2010년 3월 국제표준 최종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77개 개발참여국을 대상으로 2개월간 투표를 한 결과 93%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국제표준으로 최종결정되었다. 국제표준화기구는 2010년 11월 1일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센터에서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ISO26000 지침서를 공식 발간했다. 여기에 참가한 대부분의 국가와 이해관계자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간 거래를 함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기준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구체적인 국제표준이 없거나 불분명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유럽은 물론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도 새롭게 만들어진 국제표준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SO26000이 애초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UN의 Global Compact와 ILO(국제노동기구)가 국제표준화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도 작업과정에 깊이 관여하여 만들어졌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반응은 당연히 예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뜨거운 국제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ISO26000이 말 그대로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력한 국제표준으로 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참가국들 중 93%가 찬성을 한 이 국제표준에 대해 5개국이 반대를 했는데, 그 중에는 국제사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가장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¹⁾.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새롭게 마련된 국제표준에 적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편, 미국과 미국기업들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영향력만큼이나 새롭게 마련된 국제표준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고 어쩌면 ISO26000의 명운을 좌우할지도 모른다. 국제표준이 이제 막 발표된 시점이고 개별 기업과 국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아직 미국의 태도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미국 자본주의의 성격,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흐름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흐름을 파악할 수는 있다. 그런 범위 내에서 국제표준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해석해 보도록 한다.

■ ISO26000

ISO26000에 대한 미국내 반응은 조용하다. 컨설팅 업체, CSR 온라인커뮤니티, 우수 다국적기업의 홈페이지 등에서도 ISO26000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ISO26000과 관련해서 컨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ISO26000을 UN Global Compact나 GRI 가이드라인과 어떻게 연계시킬까 하는 정도의 수준이다²⁾. CSR 관련 웹사이트에 올라온 한 포스팅은 ISO26000이 내포한 한계를 잘 보여준다. “ISO26000은 이쪽 분야 비전문가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쉬운 가이드런스(guidance)로서는 의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ISO26000은 기존 CSR 윤리강령(예컨대, UN Global Compact, GRI 가이드라인 등)에서 진전된 바가 없다. 또한 ISO26000 홀로 독자적으로 쓰일

1) http://www.iso.org/iso/isofdis_26000-ballot_result.pdf

2) http://www.globalreporting.org/NR/rdonlyres/E5A54FE2-A056-4EF9-BC1C-32B77F40ED34/0/ISOGRIReport_FINAL.pdf, <http://www.gcnordic.net/ckfinder/userfiles/files/Barton-ISO26000.pdf>

만큼 유용성면이나 내용면에서 깊지 못하다.”… “ISO26000은 자발적 가이드선스 기준이다. 제3자 인증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어떤 나라들에서는 ISO26000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컨설턴트들은 인증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에 따른 트레이닝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미 CSR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해 왔던 다국적기업들에게 ISO26000은 큰 의미가 없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그들이 해 오던 활동들에 더 집중하는게 낫다.”³⁾

이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노동관행 부분에 한정해서 크게 두 가지, 즉 내용상 이슈와 대표성 이슈를 언급하기로 한다.

내용면으로 볼 때, ISO26000의 노동관행 코드(Code of Conduct)는 기존의 규정들, 즉 UN인권선언, ILO의 노동기본권관련 핵심협약, UN Global Compact 원칙, GRI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딱히 선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한 연구자는 “인권(human rights) 부분과 노동관행(labor practices) 부분으로 나눠놓은 문제,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가 포함된 문제, 기존 국제기구 규정들을 그대로 포함한 문제 등에 있어서 어떤 일관된 원칙이나 논리성이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⁴⁾.

한편 내용상의 이슈 못지 않게 대표성과 수용성의 문제도 거론된다. 이미 윤리강령은 나올 만큼 많이 나왔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수많은 강령이나 가이드라인 중 ISO26000이 어떤 포지셔닝을 할 것이고 어떤 대표성을 지닐 것이며 어떻게 업계나 CSR 필드에 수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국제투자지수(예컨대,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나 영국의 FTSE4Good 지수), 대학연구기관 지수(보스턴대학 지수), 국제기구 지수(UN Global Compact) 등 사이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가 이슈이다. 또한 현재 미국은 각 산업별 관행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예컨대, 스포츠, 의류부문은 FLA(Fair Labor Association), WRC(Workers' Rights Consortium) 등을, 정보통신산업은 EICC(Electronics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GeSI(Global e Sustainability Initiative) 등을 진행시켜 왔고 이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자리잡고 있다. 또한 아예 업계자체의 강령 통합 움직임을 보이면서 GSCP(Global Social Compliance Program) 등이 요즘

3) BSR 블로그. <http://blog.bsr.org/2010/09/iso-26000-approved-for-publication-now.html>

4) 필자 인터뷰(11월 15일).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요즘 미국내 분위기는 강령(Code)이나 가이드라인의 존재여부(in-the-book)보다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든지 불문하고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대로 실행할 것인가(in-action)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ISO26000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컨설팅, NGO 및 CSR단체들은 기존에 그들이 해 왔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한 발전, 윤리경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의 제도화는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자유시장의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1960년대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인권 보호를 위해 일부 기업에 의해 CSR이 시작되었고, 일부 독과점 기업들 중 사회적으로 민감한 제품들(담배, 석유)을 파는 회사들이 사회적 비판을 희석시키고자 시작된 것이 미국내 또 하나의 큰 CSR의 흐름이다. CSR이 기업의 이미지, 평판에 영향을 주고, 좋은 이미지와 평판은 기업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개별 기업은 처한 여건에 따라 이러한 평판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가능하거나, 혹은 중요성에 따라 CSR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국가가 CSR에 대한 법을 제정하거나 독려하는 차원이 아닌 개별 기업의 문제로 인식을 해 왔고, 이 기업들은 개별 기업의 목표와 환경에 따라 CSR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CSR이 제도화가 되고 규범이 된다는 의미는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CSR의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CSR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단지 또 하나의 비용으로밖에 인식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에 발표된 논문⁵⁾에서 CSR의 제도화는 CSR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개도국 기업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한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제품이나 환경 관리와는 달리 CSR은 개별 기업이 처한 여건과 능력에 따라 다르게 전개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여건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게 똑같은 CSR을 요구하는 ISO26000은 오히려 기업들의 CSR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기업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익을 극대화하여 주주들에게 최대의

5) Schwartz, Birgitta and Karina Tilling(2010), “‘ISO-lat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Organizational Context: A Dissenting Interpretation of ISO26000.”

이익을 가져다줌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기본적 전제에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크다. 이러한 자유시장의 관점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깊숙이 관여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천하는 유럽과는 달리, 기업가정신을 장려해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미국의 기업 중심 문화는 이러한 주장에 더 설득력을 가지게 한다. 특히 기존의 ISO9001, ISO14001은 많은 기업들에 의해 채택이 되었고, 품질과 환경 관리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표준화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측면도 제도의 채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ISO26000의 경우 표준화라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범과 제도를 망라함으로써 개별 기업들이 실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예상이 된다.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미국에서 제도나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ISO제도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부정적 관점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유시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ISO 26000이 실행되지 않도록 반대를 해야 하며, 개별 기업들 또한 제도의 모호성을 이해하고 제도의 채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충고한다⁶⁾.

■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SO26000은 세계 다른 곳과 달리 미국에서만 냉담한 반응을 받고 있지만, 이를 두고 CSR의 국제표준화는 실패라고 단정짓거나 그와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UN, ILO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GRI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ISO26000이 만들어 졌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되는 단일표준을 마련하는 데 많은 국제기구가 힘을 모은 것으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할 측면이 있으나, 이는 역으로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개별 기업과 국가가 적용해 오던 것을 단순 종합,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똑같은 내용의 규제수단을 또 하나 더 만드는 것이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이미 산업별, 기관별 등으로 Code of Conduct를 만들어 오랫동안 실행해 왔고,

6) Roberts, James M. (2010), How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O26000) Mandates Undermine Free Markets.

그간의 성과에 기초하여 이제는 새로운 가이드언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이드언스를 얼마나 제대로 실행에 옮기느냐가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성과를 무시하고 ISO26000에 모든 기업활동을 또다시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이를 처음으로 실행하는 국가나 기업의 입장과 달리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ISO26000은 실행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미국의 반응을 바꿀 수 있으므로 그 성패여부를 속단하기는 아직 많이 이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의 소극적인 반응이 CSR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미국과 미국 기업들은 보다 실제적인 CSR, 개별 기업과 조건에 맞는 사회적 책임 실현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KLI**